

공공디자인에서의 시민참여 기반 강화에 관한 연구

서울시 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A Study on Enhancing Citizen Participation in Public Design

Focusing on Policy Changes i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주 저 자 : 신문경 (Shin, Moon Jung)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공공디자인전공 석사과정

교 신 저 자 : 장영호 (Jang, Young Ho)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공공디자인전공 교수
nagoyajang@hongik.ac.kr

<https://doi.org/10.46248/kids.2026.1.204>

접수일 2026. 02. 15. / 심사완료일 2026. 02. 27. / 게재확정일 2026. 03. 09. / 게재일 2026. 03. 30.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social functions of public design and the institutional feasibility of citizen participation, and investigates the causes behind the recent decline and disappearance of participation-based public design policies in Seoul. The research aims to propose strategies for restoring a sustainable participation structure. The analysis draws on the First Public Design Promotion Master Plan, relevant laws and municipal ordinances, Seoul's public design project documents, and the city's budget reports from 2021 to 2025. In addition, the study reviews the participation structures and role distribution among citizens, experts, and administrative bodies within the Seoul Design Governance model. The findings indicate that, as Seoul's policy orientation shifted toward administrative efficiency, budgets for citizen-participatory public design projects were gradually reduced and eventually eliminated by 2024-2025. The analysis also confirms that public design operates most effectively when participation is structured by stage—citizens in problem identification, experts in design and technical development, and maintenance agencies in early feasibility assessment.

Keyword

Public Design(공공디자인), Citizen Participation(시민참여), Design Governance(디자인거버넌스), Public Policy(공공정책), Environmental Design(환경디자인)

요약

본 연구는 공공디자인의 사회적 기능과 시민참여의 제도적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최근 서울시에서 참여 기반 공공디자인 정책이 축소된 원인을 분석하여 참여 구조 회복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관련 법령·조례, 서울시 공공디자인 사업 자료 및 2021~2025년 예산서를 분석하고, 디자인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시민·전문가·행정 간 참여 구조와 역할 분담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서울시는 최근 행정 효율성 중심의 정책 기조로 전환되면서 시민참여형 공공디자인 예산이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24-2025년에는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민은 문제 발굴, 전문가는 설계·기술 검토, 유지관리 기관은 기획 초기의 관리 가능성 검토 등 단계별 참여가 이루어질 때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지는 구조적 특성이 확인되었다.

목차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 1-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2. 이론적 배경

- 2-1. 공공디자인의 사회적 기능
- 2-2. 시민참여의 정책적 의미
- 2-3. 공공디자인과 참여의 상호작용

3. 공공디자인 제도 및 정책 구조의 변화

- 3-1. 국가 공공디자인 정책 구조

- 3-2. 서울시 공공디자인 법제도 및 행정체계
- 3-3. 서울시 시민참여 사업 분석

4. 참여 기반 추진체계 재구축을 위한 제언

- 4.1. 단계별 참여 구조의 재설계
- 4.2. 참여 구조의 제도화
- 4.3. 소결

5. 결론

참고문헌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도시의 공공영역은 시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공공디자인은 공공성, 접근성, 포용성 등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최근 도시정책은 공간의 물리적 개선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정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디자인은 기획-설계-구현-운영-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시민의 경험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법·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공공디자인에서의 시민참여는 이미 필수 요소로 규정되어 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공공디자인 시행 시 지역 주민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는 정책 형성과정 전반에서의 참여권을 보장하며, 다양한 참여 방식의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 즉, 공공디자인은 법적·제도적으로 시민참여를 전제로 설계된 정책 영역이다.

그러나 실제 서울시 공공디자인 정책은 이러한 제도적 원칙과 상당한 괴리를 보인다. 서울시에서는 2015년 이후 2021년까지 디자인거버넌스와 공공디자인 시민공모전 등 시민참여 기반의 공공디자인 행정을 운영해 왔으나, 2023년 「디자인서울 2.0」 발표 이후 시민 중심의 참여체계는 급격히 축소되었고, 정책 구조는 행정과 전문가 주도의 행정 중심의 정책 추진 구조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예산 구조에서도 드러난다. 2021년에는 시민공모전과 디자인거버넌스에 약 5억 원 이상이 배정되었으나, 2022년 이후 참여 관련 예산은 단계적으로 감소하였고, 2024-25년에는 시민참여형 공공디자인 사업 예산이 미편성되면서 시민이 공공디자인 의제를 제안하거나 공동설계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 사업 경로는 축소되었으며, 제도적으로 규정된 참여 절차 역시 실질적인 정책 형성 과정에서의 영향력이 약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민참여가 약화되는 현상은 공공디자인 정책의 실효성과 정당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공공디자인은 안전성, 내구성, 법규 준수 등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시민참여가 모든 단계에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은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정책 의제로 제시할 수 있으므로 문제 발굴과 의제 설정 등 초기 단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한다고 할 수 있다. 이후에 이루어지는

설계·구현 단계는 전문가와 행정의 기술적 판단을 중심으로 이루어내야 전반적인 실효성과 당위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결과적으로 시민참여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행정·전문가·유지관리주체가 각각의 역할을 분명히 수행하는 단계별 참여구조가 필요하며, 시민의 참여 또한 전제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만, 현재 서울시 정책에서는 시민참여뿐 아니라 유지관리 부서의 초기 참여 또한 제도화되지 않아, 공공디자인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고, 이는 시민참여 부재가 시민의 생활경험과 동떨어진 결과물을 양산하고 정책의 수용성과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시민참여 기반의 정책환경에 관한 연구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시민 중심 협력 디자인’은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획·설계·운영 과정에서 시민이 의견 제시 또는 공동 설계 방식으로 참여하는 정책 추진 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행정과 전문가 중심의 전통적인 공공디자인 추진 방식과 달리 시민의 생활 경험과 지역 문제를 정책 의제 형성과 설계 과정에 반영하는 참여형 정책 접근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공공디자인 거버넌스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볼 수 있다.

1.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공공디자인 정책환경 내에서 법·제도는 시민참여를 전제로 하지만 실제 정책·예산 구조는 시민참여 기반이 점차 상실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서울시 공공디자인 정책 변화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시민참여 기반 약화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시민을 중심으로 하되, 전문가·행정·유지관리주체의 단계별 역할을 명확히 하는 새로운 참여모델을 제안함으로써, 공공디자인 정책의 공공성·참여성·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공공디자인 관련 법·제도 문헌 분석과 함께, 서울시 공공디자인 정책 자료 및 2021~2025년 예산서를 중심으로 정책 변화 과정을 분석한다. 또한 시민·전문가·행정·유지관리주체 간 참여구조를 단계별로 검토함으로써 시민참여 기반 약화의 구조적 원인을 도출하고, 디자인 정책에서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공공디자인의 사회적 기능

공공디자인은 도시환경의 물리적·사회적 맥락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정책 영역으로, 단순한 조형적 결과물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공공 영역에서의 디자인은 시민의 이동과 공간 경험을 개선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연결하며, 도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공공디자인은 기획-설계-운영-평가 등 행정 과정 전반에서 시민의 경험과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적 성격을 포함한다. 이러한 관점은 공공디자인을 ‘물리적 환경 개선’이 아닌 ‘사회적 공공재 형성 과정’으로 이해하는 최근 공공정책 및 디자인 연구의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UN-Habitat(2015)는 공공공간을 사회적 상호작용과 공동체 형성을 촉진하는 핵심 인프라로 규정하며, 공공디자인을 도시 포용성과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는 정책 수단으로 제시한 바 있다.

공공디자인은 물리적 시설의 개념에서 벗어나, 시민의 삶과 문화적 가치를 담는 총체적 의미로 확장되고 있다(제지수, 2025). 공공디자인의 기능이 단순히 물리적 공간의 개선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일상적 경험과 밀접하게 연관되며, 도시정책을 시민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기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공공디자인은 행정 서비스와 시민 경험을 연결하는 매개 장치로 설명된다. 박서화·노승원(2012)은 공공디자인이 정책을 시민의 실제 이용 경험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분석하였으며, 이는 공공디자인이 결과물보다 ‘과정에 의해 사회적 기능을 강화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인식의 확장 속에서 법·제도, 정책 문헌, 학술 연구는 공공디자인의 역할과 기능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다.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제도, 정책 문헌, 학술 연구는 공공디자인의 기능을 서로 다른 층위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공공디자인의 사회적 기능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공공성(publicness)의 실현이다. 공공디자인은 공공공간에서 시민의 접근성, 안전성, 이용 편의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주민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공성 확보는 디자인의 조형적 완성도가 아니라, 정책적 과정과 행정적 책임의 영역으로 이해된다. 둘째, 시민 경험의 매개 장치로서 기능한다. 공공디자인은 특정 공간의 미적 개선뿐 아니라, 그 장소를 사용하는 시민들의 동선·인지·정서적 반

응 등 일상 경험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경험적 요소는 디자인 결과물이 아닌 프로세스 단계의 참여 구조를 통해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즉, 디자인의 사회적 기능은 단순한 ‘만들기(making)’가 아니라 ‘만드는 과정(being made)’에서 비롯된다. 셋째, 도시 정체성 형성과 사회적 가치 창출이다. 공공디자인은 지역 고유의 문화·역사·경관을 시각적으로 통합함으로써 도시의 이미지와 정체성 형성에 기여한다. 이는 단일 시설이 아니라 도시 정책의 장기 목표와 연결되기 때문에, 행정·전문가·시민이 공동으로 기획하는 전략적 디자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표 1 참조)

[표 1] 공공디자인의 사회적 기능 비교

구분	내용	비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공공간·시설물의 질을 개선하여 공공성·안전성·편의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이용을 증진	공공성, 안전, 이용권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¹⁾ (2018)	공공디자인을 통해 도시 공공 영역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공공서비스 기능 수행	공공성, 도시서비스
공공 서비스 디자인을 위한 사용자 참여형 디자인 프로세스 모델 연구, 박서화, 노승원(2012)	공공디자인이 정책·서비스를 시민의 실제 이용 경험으로 전환하여 만족도와 체감 효과를 높이는 기능 수행	시민 경험, 참여
공공디자인 거버넌스에 기반한 협력 모델 디자인 연구, 이현성, 이석현(2025)	공공디자인이 행정·전문가·시민 간 협력을 통해 공공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사회적 조정 장치로 기능	거버넌스, 시민참여, 매개
자치단체 공공디자인 촉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8)	공공디자인을 통해 지역 이미지·매력·장소성을 강화 및 주민의 자부심과 귀속 의식을 제고	지역 정체성
Habitat III Issue Paper 11: Public Space UN-Habitat (2015)	공공공간이 포용적 접근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공동체 형성과 사회적 통합에 기여	사회적 가치 창출

이러한 공공디자인의 사회적 기능은 디자인 결과물 자체보다 설계 과정에서의 참여 구조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최근 공공디자인 연구에서는 시민을 단순한 정책 수혜자가 아니라 설계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로 이해

1)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2018~2022)」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수립한 법정 계획이며, 이는 공공디자인이 단순한 미적 개선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사람 중심’ 공공서비스로 기능하도록 정책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는 참여디자인(participatory design) 접근이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여디자인은 사용자 조사, 공동 아이디어 도출(co-design), 시범 적용 및 사용자 평가 등 단계적 설계 과정을 통해 공간 이용자의 경험을 디자인 과정에 반영하는 방법론이다. 이러한 접근은 공공디자인이 단순한 물리적 환경 개선을 넘어 시민 경험을 기반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과정 중심의 정책 도구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가 차원의 공공디자인 종합계획에서도 공공디자인을 도시서비스의 일부로 규정하며, 공공성·안전성·편의성·심미성을 포함한 ‘도시 공공영역의 질’ 향상이 정책 목표로 제시된다. 이러한 배경은 공공디자인이 단순한 시설물 개선이 아닌 사회적 공공재 형성과정임을 보여준다.

2.2. 시민참여의 정책적 의미

공공디자인은 시민의 일상 경험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책 분야이므로, 시민이 문제를 정의하고 의제를 제시하는 초기 단계에서 참여할 때 정책의 효과가 가장 크다. 아른스타인(1969)의 ‘참여의 사다리 이론’에서는 시민참여의 수준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단순히 참여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참여의 권한과 역할을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참여의 사다리에서 제시된 단계적 접근 방식은 공공디자인에서 시민참여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와 같이, 단순히 참여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참여의 권한과 역할을 단계별로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정책의 실효성(Efficiency)과 정당성(Legitimacy)을 동시에 확보하는 핵심 원칙이 된다.

따라서 시민참여의 정책적 의미는, 첫째, 정책의 정당성 확보에 기여한다. 공공디자인은 시민의 일상적 공간 경험을 다루기 때문에, 시민의 참여는 정책 형성과정에 대한 신뢰와 수용성을 강화한다. 참여 여부는 정책의 성공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며, 참여의 범위와 단계에 따라 정책의 사회적 파급력도 달라진다. 이러한 정당성 확보는 공공디자인의 공공성 실현 가능성과 밀접히 연관된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도 시민의 참여가 공공디자인의 정당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둘째, 정책 실효성 제고와 연결된다. 시민의 의견이 초기 문제 정의 단계에서 반영되면 실제 생활세계의 문제에 기반한 정책 설계가 가능하다. 이는 공공디자인이 시민 경험에 기반한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시민참여는 앞에서 설명한 시민 경험의 매개

기능과 연결되어, 시민의 실제 이용 경험을 반영하는 매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공공디자인의 실효성 제고와 직결된다(박서희, 노승완, 2012). 셋째, 공공디자인의 운영·유지관리 단계에 대한 피드백 구조를 제공한다. 공공디자인의 지속가능성은 설치 이후 운영·관리 과정에서 결정되므로, 관리주체(자치구·사업소·시설관리공단 등)와 시민의 정례적 참여는 시설물의 수명과 운영 효율성, 민원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공공디자인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공디자인의 사회적 기능 중 하나인 지속가능성과 연결된다. 그러나 이러한 참여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에서는 최근 참여 기반이 해체되는 흐름을 보인다.

국가 차원에서도 시민참여는 공공디자인 정책의 핵심 요소로 규정된다.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2018~2022)」은 ‘지역 기반 공공디자인 추진체계 고도화’를 목표로 하여, 주민참여 절차 확립과 지역 이해관계자 협력 구조를 공공디자인 행정의 필수 요소로 제시하였다. 이는 앞에서 다룬 공공디자인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시민·전문가 행정이 협력할 수 있는 복합 시스템의 형성해야 함을 보여준다.

2.3. 공공디자인과 참여의 상호작용

공공디자인에서 시민참여는 단순한 의견수렴 절차를 넘어, 정책 설계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소로 기능한다. 시민참여가 활성화될 경우, 우선 문제 정의 단계에서 시민의 생활경험이 직접 반영되면서 실제 생활세계에 기반한 문제 인식이 가능해진다. 이어 설계 단계에서는 전문가의 기술적 역량과 시민의 관점이 결합되며, 이로 인해 공공디자인이 현실적 필요와 전문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운영 단계에서는 시민과 관리주체의 피드백이 순환적으로 축적되며, 유지관리의 질을 향상시키는 구조가 형성된다. 이러한 단계별 참여 구조는 공공디자인 거버넌스 논의에서 제시되는 ‘역할 분화형 참여 모델’과 연결된다. 이현성·이석현(2025)은 공공디자인 거버넌스를 행정·전문가·시민 간 역할 분담에 기반한 협력 구조로 설명하며, 참여 주체별 기능이 명확할수록 정책의 실행 안정성이 높아진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공공디자인에서 시민참여는 모든 단계에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계의 특성과 목표에 맞추어 적합한 참여 방식을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문제 정의 단계에서는 시민이 주도적으로 관

여하고, 설계 단계에서는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시민 의견을 기술적으로 반영하며, 운영 단계에서는 관리주체와 시민의 지속적 피드백 구조가 마련되는 방식의 단계별 참여모델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3. 공공디자인 제도 및 정책 구조의 변화

3.1. 국가 공공디자인 정책 구조

우리나라에서 공공디자인 정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화된 것은 2018년에 수립된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2018~2022)」부터이다. 종합계획에서는 공공디자인을 단순한 시각·조형적 개선이 아닌,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재편하고 공공영역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적 도구로 규정하였다. 그 안에서 공공디자인은 지역 사회 안전 확보, 공공성 강화, 주민 편의 증진, 심미성 향상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행정 분야로 정의되었으며, 도시 전체 시스템 속에서 공공디자인을 도시정책의 ‘사람 중심’ 공공서비스로 재배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종합계획은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공공디자인 정책을 다섯 가지 추진전략, ① 생활안전, ② 모든 이를 위한 디자인, ③ 생활편의, ④ 생활품격, ⑤ 기초 강화로 체계화한다. 특히 다섯 번째 전략인 기초가 튼튼한 공공디자인은 공공디자인을 지속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전략으로, 주민협의체 활성화, 시민참여 절차 마련, 전문인력 교육, 공공디자인 관리체계 정비 등 참여·협업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 과제로 포함되어 있다. 즉, 시민참여가 독립된 전략으로 제시되지는 않지만, 공공디자인 추진체계의 기반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로 계획 내부에 명확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시민참여를 단순한 의견수렴 절차로 다루지 않고, 공공디자인 사업 전반에 구조적으로 통합할 것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 워크숍 도입, 지역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 사업 절차별 참여 매뉴얼 마련, 평가 단계에서 참여 수준 지표화 등 참여를 제도화하는 구체적 실행 방안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원칙은 당시 여러 지자체에서 확산되고 있던 참여 기반 공공디자인의 시도와 맞물리며, 종합계획은 이를 국가 정책 체계 안에서 공식적으로 정립한 최초의 문서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결국 제1차 종합계획은 공공디자인을 공공영역의 질

개선을 위한 체계적 행정 절차로 재정의하고, 시민·전문가·행정·지역사회 간 협업과 참여를 공공디자인 추진 체계의 핵심 구조로 명확히 위치시키며 이후 지자체 공공디자인 정책 운영의 기준점 역할을 하였다.(표 2 참조)

【표 2】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참여 관련 구조

구분	주요 내용	시민참여 관련 요소
계획 기간	2018~2022	-
정책 성격	공공디자인을 공공서비스로 규정	주민 경험 기반 접근
5대 전략	생활안전 / 모든 이를 위한 디자인 / 생활편의 / 생활품격 / 기초 강화	‘기반 강화’ 전략에 참여 절차 포함
참여 방식	주민협의체, 워크숍, 이해관계자 협업	제도화된 참여 구조 지향
정책적 의미	결과물이 아닌 추진체계 중심	참여를 필수 행정요소로 위치

3.2. 서울시 공공디자인 법제도 및 행정체계

서울시는 2007년 「디자인서울」 정책을 기점으로 공공디자인을 도시정책의 핵심 전략으로 위치시켰으며, 이후 법적·행정적 기반을 정비해 왔다.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2019년 제정)는 공공디자인의 목적을 도시 공공영역의 공공성·심미성·기능성 향상에 두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행정절차의 일부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조례 제22조(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 제6호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의 공공디자인 사업은 제도적으로 시민참여를 필수적 요소로 전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2025)는 서울시 행정 전반에서 시민참여를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며, 정책 형성과정에서 다양한 참여 방식(공청회, 참여예산, 온라인 의견수렴 등)을 행정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표 3 참조)

【표 3】 서울시 공공디자인 관련 법·조례와 시민참여 규정

구분	법·조례명	시민참여 관련 조항	제도적 성격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주민 의견수렴 의무	선언+절차 규정
조례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민 의견 적극 반영	사업 원칙
조례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정책 전 과정 참여 보장	행정 전반 적용

이러한 조례 체계만 보면, 서울시 공공디자인 행정은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하다. 그러나 제도적 선연과는 달리, 실제 서울시 공공디자인 행정은 참여 기반의 지속력과 구조적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운영되어 왔다. 이러한 현실은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참여형 공공디자인 사업의 예산구조 변화에서 뚜렷하게 확인된다.

3.3. 서울시 시민참여 사업 분석

3.3.1. 디자인거버넌스 사업²⁾ 및 시민공모전

서울시 디자인거버넌스는 시민 중심의 협력 디자인 행정을 구현한 대표 사례로, 구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러한 삼자 협력 구조는 공공디자인 행정의 폐쇄성을 완화하고 정책 실행 과정에 사회적 합의를 내재화하는 역할을 했다. 특히 시민이 '문제 인식-해결 설계-평가'의 전 과정에 관여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이 실생활의 문제 해결로 이어지는 구조를 가능하게 하였다.(표 4 참조)

[표 4] 서울시 디자인거버넌스 운영 구조

구분	주요 주체	역할
시민	의제 제안자 / 현장 참여자	문제 제기, 참여 설계
전문가/기업	설계기획자	디자인 솔루션 개발, 실행
행정	조정자 / 지원자	예산결차 관리, 제도화 지원

서울시 디자인거버넌스는 2015년 도입 이후 「어르신 문화활동 공간 및 프로그램 디자인」,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승하차 유도 디자인」, 「영유아 동반 시민의 편안한 외출 디자인」, 「한강공원 야간 자전거 안전운행 유도 디자인」 등 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 공공디자인 사업이 다수 추진되었으며, 이를 통해 주민-전문가-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업 기반 구조가 안정적으로 구축되었다.(표 5 참조)

2) 디자인거버넌스는 전통적인 행정 주도 방식 (Government)에서 벗어나, 디자인 정책 기획-실행 과정에 행정, 전문가,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협력적 통치 구조 (Governance)를 의미하며, 특히 공공디자인 분야에서는 문제 정의부터 운영-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사회적 합의와 협력을 내재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표 5] 서울시 디자인거버넌스 주요 추진 현황

년도	활용대상	디자인 결과물
2017년	한강공원	
2020년	어린이 대공원	
2021년	노인종합 복지관	
2022년	서울숲	

2015-21년에는 디자인거버넌스 외에도 시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물로 제작-설치하는 공공디자인 시민공모전을 운영하였다. 이는 시민이 공공디자인 의제를 직접 제안하고 정책화할 수 있는 통로로서 기능했고, 수상한 작품을 실물로 제작하여 서울시 전역 약 78개소에 설치되어 시민들의 유용한 시설물로 활용되었으나, 2021년에 약 1억 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된 것을 마지막으로 사업이 종료되었다.(표 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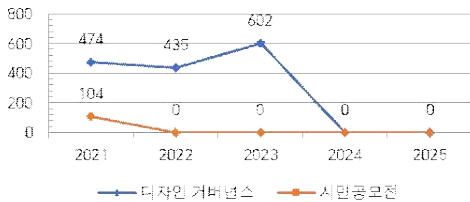
[표 6] 서울시 공공디자인 공모전 수상작품 주요 설치 현황

년도	설치장소	설치사진
2019년	DDP	
2020년	DDP	
2021년	잠실올림픽 경기장	

3.3.2. 서울시 시민참여 사업의 축소

2022년 이후 참여 기반은 점차 축소되기 시작하였다. 2022년 디자인거버넌스 예산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고, 2023년에는 예산 규모가 확대된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약 1억 7천만 원이 플랫폼 고도화와 같은 기술적 항목으로 배정되어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실질적 운영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또한, 2023년 디자인거버넌스 사업은 시민참여 없이 서울시 내부 협력으로 추진되는 형태로 변경되었다. 이 시기부터 시민참여의 방식도 공동설계 중심에서 의견수렴 중심으로 축소되며, 시민의 역할이 실질적 '공동 생산자'에서 '피드백 제공자'로 전환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2024년과 2025년에는 이러한 변화가 더욱 뚜렷해져 서울시 예산서에는 시민참여형 공공디자인 사업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이는 예산편성 구조에 따른 영향도 있을 수 있으나, 정책 변화에 따른 사업 축소, 이슈에 민감한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 등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지방재정 편성 방향을 고려해볼 때 참여 기반 공공디자인 정책의 추진 여건이 악화되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며, 이는 시민이 공공디자인 의제를 제안하거나 정책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 사업 경로 역시 이전에 비해 축소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서울시 시민참여 예산 변화

3.3.3. 참여 기반 약화의 구조적 원인

서울시의 참여형 공공디자인 사업이 축소하게 된 원인은 단일 요인이자기보다 정책 방향 변화, 행정 효율성과 부담, 유지관리체계와의 불일치 등의 복합적 요인이 결합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023년 발표된 「디자인서울 2.0」은 공공디자인을 도시 품질 고도화와 전문성 중심의 정책 영역으로 재편하며, 시민참여를 핵심 전략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참여 기반 정책보다는 전문가 중심의 조정·설계 시스템을 강화하는 정책적 선택이었다. 또한, 참여형 공공디자인 사업은 부서 간 조정, 전문가 섭외, 주민 소통 등 행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특성 때문에 최근 서울시의 행정 효율성 중심 기조와 상충하는 면을 갖는다.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공공디자인은 설치 이후 자치구 사업소·시설관리공단 등의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기관들이 초기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도록 하는 구조가 제도적으로 자리 잡지 못하면서 참여 프로그램이 '추가 업무'로 인식되고 제도적 지속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 아울러 최근

참여 절차가 서류상 구성되더라도 실질적 논의 과정 없이 공청회나 온라인 설문 등의 형식적 절차로 대체되는 경향이 관찰되며, 이는 공공디자인 사업에서 시민참여가 정책의 실질적 구성요소로 작동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 측면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종합해보면, 서울시의 공공디자인 정책은 시민참여 기반의 축소라는 큰 변화를 겪었다. 2023년 이후, 시민참여 예산은 줄어들거나 사라졌고, 정책의 주요 전략에서 시민참여가 제외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예산 삭감에 그치지 않으며, 공공디자인의 본질적 기능인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전제로 한 공공디자인의 정체성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주목할 점은 서울시가 여전히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진적인 공공디자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참여가 축소되고 있다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민참여는 공공디자인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만약 선진적인 시스템을 갖춘 서울시에서조차 시민참여가 약화된다면, 지금까지 서울시의 정책시스템을 답습하는 경향에서 볼 때, 다른 지자체들에게도 부정적인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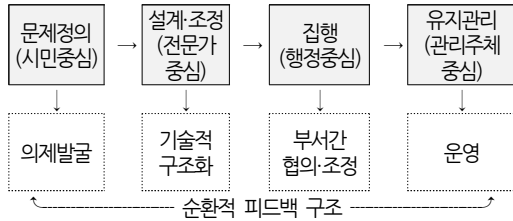
따라서 서울시의 시민참여 축소는 정책의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공공디자인 정책의 후퇴를 예고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재구성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의 사례는 타 지자체에 있어서 선진적인 시스템 구축의 모델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참여 축소라는 역행 사례로서 경계해야 할 대상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타 지자체들은 서울시의 시스템을 참고하되, 시민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정교화하여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참여 기반 추진체계 재구축을 위한 제언

4.1. 단계별 참여 구조의 재설계

국가 차원의 공공디자인 종합계획에서는 주민참여와 지역 협업 기반을 공공디자인 정책의 핵심 요소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실제 정책은 최근 들어 시민참여 기반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공공디자인 추진체계의 재정비는 단순히 시민참여의 확대를 넘어, 공공디자인 특성과 행정 구조를 모두 고려한 '단계별 참여 모델'의 재구축을 통해 이루어

져야 한다. [그림 2]는 공공디자인 정책이 지속가능하고 실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시민·전문가·행정·유지관리주체의 각 단계별 역할을 보여준다.



[그림 2] 서울시 공공디자인 추진체계 재구축 개념도

4.1.1. 서울시 공공디자인 의제 운영 체계

현실적으로 공공디자인 정책의 모든 단계에서 시민 참여가 실행되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이것은 시민참여가 불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참여가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단계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서울시는 시민이 제안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의제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표 7]은 과거 '디자인거버넌스 사업'에서 운영되었던 시민참여 구조를 현대화하고 체계화한 모델로, 온라인·오프라인 복합 구조의 의제 발굴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방식이다.

[표 7] 서울시 공공디자인 의제 운영 체계(안)

구분	운영 방식	담당 조직	주기
온라인 의제 수집	서울디자인X 온라인 플랫폼 내 '시민제안' 섹션 상시 운영	디자인정책담당관	상시
오프라인 의제 발굴	자치구별 분기별 '동네 디자인 타운홀 미팅' 개최	디자인정책담당관 + 자치구 디자인과 협력	분기 1회
의제 분류 및 평가	접수된 의제의 실현가능성, 공공성, 긴급성 평가	디자인정책담당관주관, 전문가 자문단 참여	월 1회
정책 의제화	우수 의제 선정 및 차년도 공공디자인 사업 계획 반영	디자인정책담당관+ 관련 실·국 협의	연 1회

4.1.2. 전문가 중심의 설계조정 단계 강화

문제 정의 이후의 설계 단계에서는 전문성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므로 전문가 중심의 설계 단계는 두 가지 방향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첫째, 공공디자인 전문가 풀을 제도적으로 운영하여 사업의 기술적 완성도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는 조경·도시·건축·산

업디자인·UX 분야 전문가가 협력하는 다학제 팀으로 운영될 수 있다. 둘째, 설계 단계에서 전문가가 시민 의제를 기술적으로 '해석하고'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즉, 시민의 '생활 기반' 문제는 전문가의 '기술적 구조화'를 통해 정책사업 단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4.1.3. 행정의 조정·집행 기능 강화

공공디자인 사업은 다수의 부서와 기관이 참여하는 특성상, 행정의 조정·계획 기능이 핵심적이나, 문제는 현재 서울시 구조에서는 참여형 사업이 행정 부담으로 인식되거나, 부서 간 조정 기능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공공디자인 추진체계에서 행정이 수행해야 할 역할은, 첫째, 참여 절차의 제도화로, 시민참여와 전문가 협업이 특정 사업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디자인 각 단계에 참여 프로세스를 사전에 규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는 참여가 '추가 업무'가 아니라 '표준 절차'로 인식되도록 만드는 데 핵심적이다. 둘째, 부서 간 협업 조정기구의 활성화로, 공공디자인은 여러 부서가 관여하기 때문에 조정 기능이 확보되지 않으면 참여 기반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매우 낮아지므로 서울시는 사업 유형별로 전담 협업체계를 유지하거나, 기존 디자인정책관 중심의 협업 플랫폼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행정은 시민참여의 완성도가 아닌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 (표 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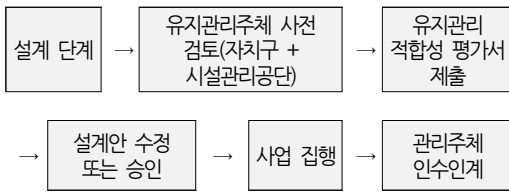
[표 8] 서울시 공공디자인 통합 조정 체계(안)

단계	참여 부서	역할	조정 주체
사업 기획	디자인정책관, 해당 실·국	시민 의제 검토 및 사업 타당성 평가	디자인정책관
예산 편성	디자인정책관, 기획조정실, 해당 실·국	사업별 예산 규모 협의 및 확정	기획조정실 주관, 디자인정책관 협의
설계 검토	디자인정책관, 미 래공간기획관, 해당 사업부서	설계안의 도시계획 경합성 검토	디자인정책관
인허가 협의	건축기획관, 도시 계획국, 자치구	관련 법규 및 인허가 사항 검토	해당 실·국
집행·감리	사업 주관 부서, 디자인정책관	설계안 이행 여부 모니터링	사업 주관 부서
유지관리 전환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사업 부서	관리주체 확정 및 인수인계	자치구 또는 관리공단

4.2. 참여 구조의 제도화

4.2.1. 유지관리주체의 참여 제도화

공공디자인 사업의 지속가능성은 설치 이후의 유지관리 단계에서 비로소 결정된다. 그러나 실제 행정 운영에서는 유지관리의 핵심 주체인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운영기관 등의 의견이 사업 추진 초기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공공디자인 추진체계는 유지관리주체를 단순한 '사후 관리자'로 간주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는 '사전 참여자'로 제도적으로 재위치시킬 필요가 있다.(그림 3 참조)



[그림 3] 유지관리주체 사전 참여 구조

특히 유지관리주체의 참여는 단순한 의견수렴 수준에 머물러서는 충분하지 않으며, 초기 단계에서 유지관리 비용과 인력의 적정성, 시설물 관리 가능성, 지역의 환경적 요인과 민원 발생 패턴, 장기적 운영 전망 등 핵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검토 과정은 전문가 설계안과 시민이 제기한 의견이 실제 행정·현장 운영 시스템과 조화롭게 결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수적이며,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절차라고 할 수 있다.(표 9 참조)

[표 9] 유지관리주체 사전 참여 체크리스트(안)

검토 항목	내용	담당 주체	시점
유지관리 비용 적정성	연간 유지보수 예산 규모 및 조달 가능성	자치구 재정과, 시설관리공단	설계안 확정 전
관리 인력 확보 가능성	전담 인력 배치 여부 및 외부 관리 계획	자치구 해당 부서, 공단	설계안 확정 전
시설물 내구성 검토	지역 환경(기후, 유동 인구 등)을 고려한 소재·구조 적합성	시설관리공단, 전문가	설계 단계
민원 발생 예측	과거 유사 시설의 민원 패턴 분석	자치구 민원담당부서	기획 단계
장기 운영 계획 수립	5년 이상 중장기 관리 계획 및 교체 주기 설정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사업 착수 전

4.2.2. 시민참여 기반의 제도적 복원 및 참여형 예산 구조 재정립

2024년 이후 서울시 예산 구조에서 시민참여형 공공디자인 사업이 사실상 소멸한 것은 정책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로 평가된다. 이를 위해 '참여형 공공디자인 예산'을 별도의 항목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산 안정성은 시민 제안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뿐 아니라, 사업 과정에서 요구되는 행정·전문가 협업 비용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이 된다. 또한 시민참여 실적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표 체계의 구축도 가능해지므로, 공공디자인 정책 전반에서 참여의 질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구조가 마련된다. 결국 별도 예산 항목의 신설은 시민참여를 공공디자인 정책의 중심적 운영 원리로 복원하는 데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4.3. 소결

종합해보면, 공공디자인 추진체계의 재구축은 시민·전문가·행정·유지관리주체가 각 단계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규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시민은 문제 발굴을, 전문가는 해결안 설계를, 행정은 조정·집행을, 유지관리 기관은 사전검토와 장기 운영을 담당하는 구조가 마련될 때 공공디자인 정책은 비로소 지속가능성과 정당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공공디자인 정책은 시민참여 기반을 단순 복원하는 수준을 넘어, 공공디자인의 본질적 특성에 맞는 단계별 참여모델로 재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성은 제도적 실현 가능성과 행정 운영의 현실성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적 제언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5. 결론

본 연구는 공공디자인 정책의 형성과 집행 과정에서 시민참여가 갖는 의미를 재검토하고, 특히 서울시의 참여형 공공디자인 사업이 최근 몇 년 동안 축소해 온 구조적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법·제도적 원칙과 실제 행정 운영 간의 간극을 규명하였다. 국가 차원의 공공디자인 정책은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2018~2022)」을 통해 공공디자인을 공공서비스 향상의 핵심 요소로 정의하고, 주민참여·지역협업·행정체계 정비 등을 정책의 중심 가치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향성은 공공디자인을 시민의 경험에 기반한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서울시의 공공디자인 정책 구조는 국가 정책의 이러한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는 흐름을 보였다. 2015년 이후 서울시는 디자인거버넌스, 공공디자인 시민공모전 등을 통해 시민참여 기반의 공공디자인 행정 체계를 구축해 왔으나, 2023년 「디자인서울 2.0」 발표 이후 시민참여는 정책의 주요 전략에서 제외되었고, 예산 구조에서도 참여형 사업 관련 항목이 전면적으로 축소되었다. 실제로 2024년과 2025년 서울시 예산에서는 시민참여형 공공디자인 사업 예산이 전체 삭감되었으며, 이는 조례에서 명시한 시민참여 의무와 명확히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 연구에서 주목한 핵심 문제는, 공공디자인 정책이 법적으로는 시민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예산 구조에서 참여 기반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괴리는 공공디자인의 정당성, 사회적 수용성, 정책 신뢰도를 약화시키며, 결과적으로 공공디자인이 시민의 일상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를 초래한다. 특히 공공디자인은 생활환경 개선과 더불어 운영·유지관리 단계까지 고려해야 하는 정책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기획 단계에서 시민과 현장 유지관리주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저하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공공디자인 추진체계를 단계별 참여구조로 재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시민은 생활 기반 문제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으므로 문제 발굴 및 의제 설정 단계에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계·기술·구조적 검토가 필요한 설계 단계에서는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시민 의제를 기술적으로 변환해야 하며, 행정은 이 과정에서 조정자·집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더 나아가 설치 이후 공공디자인의 성패를 좌우하는 유지관리 단계에서는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등 현장 운영 주체가 초기 기획 과정부터 참여해 관리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단계별 역할 분담은 참여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이며, 도시 디자인 정책의 현실적 운영 방식과도 일치한다. 또한 시민참여형 공공디자인 사업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참여 기반을 뒷받침할 예산 구조의 안정성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참여형 공공디자인 예산' 항목을 신설하거나, 기존 공공디자인 항목 내에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위한 최소 규모의 예산을 안정적으로 배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참여 기반의 단절을 막고, 시민의 의견이 장기적으로 정책 의제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경로를 복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론적으로, 서울시 공공디자인 정책에서 나타난 시민참여 기반의 축소는 단순한 사업 중단을 넘어 공공디자인의 정책적 정체성을 훼손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공공디자인이 도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활경험을 개선하는 정책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정책-예산-현장 운영의 연계 구조가 정합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단계별 참여모델은 공공디자인 정책이 이러한 정합성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실천적 방향성을 제시하며, 향후 서울시뿐 아니라 지자체의 공공디자인 정책 재정비에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시민참여 기반 공공디자인 정책의 추진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 추진 과정과 실행 방식, 운영 특성을 분석하였다. 서울시는 비교적 다양한 시민참여형 공공디자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대표적 사례라는 점에서 연구 대상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연구 범위를 서울시에 한정된 점에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디자인 정책에 일반화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특히 타 지자체의 시민참여형 공공디자인 정책 및 예산 구조와의 체계적인 비교 분석은 본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포함한 비교 연구를 통해 시민참여 기반 공공디자인 정책의 지역 간 차이와 정책 효과를 보다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25
2.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2024
3.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2025
4.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2018-2022), 2018
5.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서울시 예산, 2021.

6.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서울시 예산, 2022.
7.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서울시 예산, 2023.
8.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서울시 예산, 2024.
9.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서울시 예산, 2025.
10. 서울특별시, 디자인서울 2.0 추진 기본계획, 2023.
11.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 디자인거버넌스 운영 백서, 2021
12. 제지수, 고립·은둔 1인 청년 가구를 위한 지역 활성화 개선 제안 : 택티컬 어바니즘 기반 커뮤니티 공공디자인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5
13. 박서희, 노승완, 공공 서비스 디자인을 위한 사용자 참여형 디자인 프로세스 모델 연구, 디자인융복합연구(구.인포디자인이슈), 2012, 11(4)
14. 이현성, 이석현, 공공디자인거버넌스에 기반한 협력 모델 디자인 연구 : 서울디자인 X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디자인저널, 2025, 7(2)
1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단체 공공디자인 촉진방안, 2008
16. UN-Habitat, Habitat III Issue Paper 11: Public Space, 2015
17. Arnstein, S. R.,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1969